DYNAMIC KOREA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Free Trade Agreement

국정홍보처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Free Trade Agreement

차 례

Ⅰ. 준비는 충분히 했는가?

▶ 왜 미국과의 FTA인가? 6
▶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10
▶ 우리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14
▶ 피해 분야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17

Ⅱ. 협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충분한 준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22
▶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이 의문스럽다? 26
▶ 공청회가 구색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29
▶ 왜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가? 32

Ⅲ.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

▶ 왜 꼭 지금 해야 하는가? 36
▶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39
▶ 미국이 요구한 4개 통상현안을 협상 전에 수용했다? 43
▶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미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 47
▶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50
▶ 제조업 부문도 별 이익이 없다? 53
▶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56
▶ 국내 서비스 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 59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발 행 처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 www.news.go.kr
발 행 인 김창호
발 행 일 2006년 7월 24일
편집·디자인 유진크리에이티브(02-720-4252)
인쇄제본 삼성문화인쇄(주)(02-468-0361)
발간등록번호 11-1110050-000082-01
배포문의 국정홍보처 간행물팀(02-2100-2987~8)

Free

Trade

Agreement

I. 준비는 충분히 했는가?

▶ 왜 미국과의 FTA인가 ?

▶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

▶ 우리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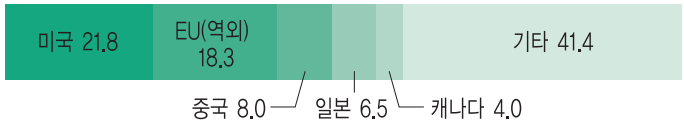
▶ 피해 분야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왜 미국과의 FTA인가?

미국은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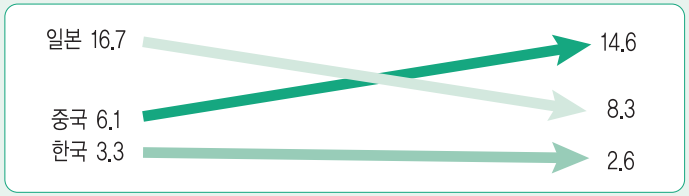
단일경제권으로 세계 최대이며, 상품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무대인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시장입니다.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2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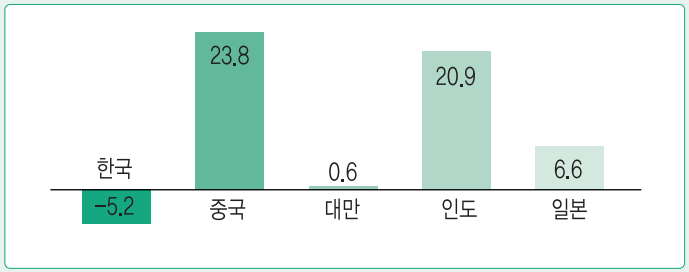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 · 인도 등의 추격으로 우리 제품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1995→2005,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2005, %)



미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며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기대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이 완화되면, 우리 경제 ·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일본 · 중국 ·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호만 하면 독립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면 독립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면 집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일종의 쇼크요법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쩌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도전해서 성공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 반도체, 전자제품, IT,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 노무현 대통령(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2006.3.23)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준도 한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FTA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효과는 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방을 미루는 것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보다 개방에 뒤처져 아픔을 겪었던 구한말의 실패는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고민과 숙고 끝에 우리나라가 주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작품입니다. 전 국민의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 경제 ·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 자동차 ·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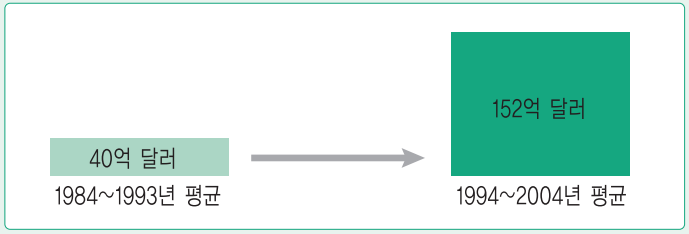
-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 60%가 한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도 36%
- 칠레의 경우 FTA 체결(2004) 이후 대미 수출 37% 증가(전체 수출증가율 25%)

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중 · 장기적으로(7~10년) 국내총생산(GDP)은 7.75%(352억 달러), 후생 수준은 6.99%(281억 달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약 52만 개는 외국인투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 항공 ·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멕시코 외국인투자 비교(1992년 미국과 FTA 체결)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재분배,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끼로 남을 것인가, 호랑이로 도약할 것인가"

세계지도상의 우리나라는 언뜻 보면 토끼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지개를 켜는 호랑이 같기도 하다. 토끼는 누군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작은 땅에 난 풀에 만족한 채 살아간다. 반면, 호랑이는 넓은 들과 산을 제 집 삼아 누비며 동물의 왕으로 살아간다. 지금 우리는 토끼의 형상으로 남을 것이냐, 기지개를 펴는 호랑이로 다시 도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월간 전경련 5월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단위 : 달러

구 분	정태적 효과 (단기) (쌀 포함)	자본축적 효과(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쌀 포함)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쌀 포함	쌀 제외
실질 GDP (금액 기준)	0.42% (29억 증가)	1.99% (135억 증가)	7.75% (352억 증가)	7.21% (326억 증가)
후생수준 (금액 기준)	0.61% (24억 증가)	1.73% (68억 증가)	6.99% (281억 증가)	6.6% (263억 증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 **정태적 효과** 양국간 무역장벽 철폐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단기적 경제효과

※ **자본축적 효과** 무역자유화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전반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동태적 효과

우리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미 FTA는 국가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 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구사, 피해 예상 분야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협상은 7월 10~14일 2차 협상 이후에도 1.5~2개월 단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 타결에 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견은 수렴하고 협상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전략 측면에서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상 전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업종별 공청회와 간담회, 지방순회 설명회, 온 · 오프라인 의견 접수, 시민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겠습니다. 1 · 2차 협상 때처럼 양측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24개 부처 137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한미FTA기획단'을 설치했으며, '한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도 격주 단위로 운영해 추진상황 및 쟁점사안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 볼 성싶으면 그것은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 부문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 살려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부문 살려나갑시다. 우리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나가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있으면 그 문제는 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갑시다.

– 노무현 대통령(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2006.3.23)

피해 분야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농업 분야 개방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늘려갈 것입니다

농업 분야 중 개방에 민감한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개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 · 칠레 FTA 체결 당시 4대 특별지원법과 농가지원을 위한 기금(2004~2010년까지 7년간 총 1조 2,000억 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출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19조 원 규모의 농촌농업종합대책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수출을 늘려갈 것입니다.

피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10년간 2조 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무역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두려워 항해를 포기한 사람은 대양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심사숙고의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바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타이밍이다. 풍랑이 두려워 항해를 포기한 사람은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다.

–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청와대브리핑, 2006.6.5)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업	자격요건	• 심각한 피해(단기간 동안 매출액 및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 발생 • FTA로 인한 경쟁상품 수입이 피해의 주원인 • 해당기업의 무역조정계획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적합
	지원사항	•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
근로자	자격요건	•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사항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 활용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Free

Trade

Agreement

II. 협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 ▶ 충분한 준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 ▶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이 의문스럽다?
- ▶ 공청회가 구색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 ▶ 왜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2003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FTA 추진을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는 비판은 그동안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단견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1~2년 내에 일본 · 싱가포르 ·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 멕시코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후에는 미국 · 유럽연합(EU) ·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과도 FT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FTA는 이미 이때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충분한 내부 논의와 전문가 연구를 거쳤습니다

2004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자문 대외경제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 대표, 외부 전문가가 모여 FTA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03년 10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FTA에 대한 예비검토를 진행해 2004년 말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한미 FTA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국회에 협상 추진상황 및 방향에 대한 보고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작 전에는 '협상목표와 우리측 협정문 초안 개요'를 국회에 제출했고, 1차 협상을 전후해서도 협상 대응방향과 협상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FTA 추진 포럼' 등 의원 모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은 협상과정은 물론 보완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미국과의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현안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의제로 양국 간에 깊이 있는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며,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쟁점들 역시 한미투자협정(BIT, 1998~2000)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2000~) 서비스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문안도 지난해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통해 검토를 마쳤습니다.

2005년에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진행,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머물면 먹고살 길이 막힌다"

개방 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흡사 '대양에 나가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위험이 따른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구에 눌러앉아 있기만 한다고 먹고살 길이 있을까? ……지금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변화를 거부하다 을사늑약으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변화를 강요당한 바 있다. 한미 FTA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국정브리핑, 2006.5.2)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이 의문스럽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대표단은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단 협상력은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시스템과 조직의 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협상력은 팀워크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분야를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한미 FTA T/F'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주재로 한미 FTA 주간 점검회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6.5~6.9)은 서로간 입장파악과 쟁점정리 및 양국이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7.10~14)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원칙과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고, 상품개방 여부 · 시기 등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등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8월 중순경에는 상품 · 섬유 · 농업 양허안을 교환키로 결정했고, 9월에는 3차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 **통합협정문 작성 분과**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 분쟁해결, 정부조달, TBT
- **통합협정문 미작성 분과**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救濟)

"한미 FTA는 '선택과목' 아닌 '필수과목'"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중국의 무서운 속도의 추격,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우리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면, 거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학생에 비유하자면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인 셈이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국정브리핑, 2006.5.17)

공청회가 구색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공청회가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협상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협상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공청회가 중단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반대단체는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의사전달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공청회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뜻과 다르다 해서 회의진행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의사 개진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도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협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상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과 더불어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강한 팀과 경기해야 강해집니다"

아드보카트 전 감독은 한국 팀이 우리보다 더 강한 팀과 경기하는 경험을 가져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떠났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정례브리핑, 2006.6.29)

왜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가?

협상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차 협상을 전후로 언론과 국회에 정부의 기본입장과 양국의 주요 쟁점 및 협상결과를 공개했으며, 협상기간 중에도 각각 서너 차례 진행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요구대로 협정문 초안 등 진행 중인 협상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 외교 관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상 상대국 등에게 우리의 협상전략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마지노선이 노출되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협상의 마지노선이 쟁점화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부분까지 노출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해 국력을 낭비할 우려도 큽니다. 앞으로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면 더욱 세심하게 협상과정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12조 원 정도의 기대효과, 1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김재철 전 무역협회장(경제5단체장 간담회, 2006.2.10)

Free

Trade

Agreement

III.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

- ▶ 왜 꼭 지금 해야 하는가?
- ▶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 ▶ 미국이 요구한 4개 통상현안을 협상 전에 수용했다?
- ▶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미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
- ▶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 ▶ 제조업 부문도 별 이익이 없다?
- ▶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 ▶ 국내 서비스 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

왜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세계는 FTA 체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한 지역내 개방화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가운데 1996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 60%가 넘는 120건에 달합니다.

오늘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세계 시장이 FTA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습니다.

개방과 경쟁은 '필수' 생존전략입니다

19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발도상국들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나 폐쇄정책을 고수한 국가들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개방과 경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 생존전략입니다. 개방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그만큼 해외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사냥을 위한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몸집이 커진 우리 경제의 에너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적입니다. 한미 FTA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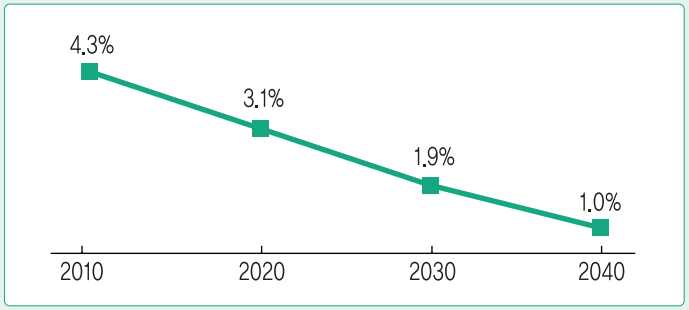
– 박홍수 농림부 장관(국정브리핑, 2006.3.7)

성장동력과 해외시장 확대의 적기입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속도경쟁에서의 탈락을 의미합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지금이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양극화는 FTA가 아닌 세계화 과정의 현상입니다

빈곤층의 증가와 사회 양극화는 세계화 · 정보화 ·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빈곤문제의 경우 FTA 체결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FTA를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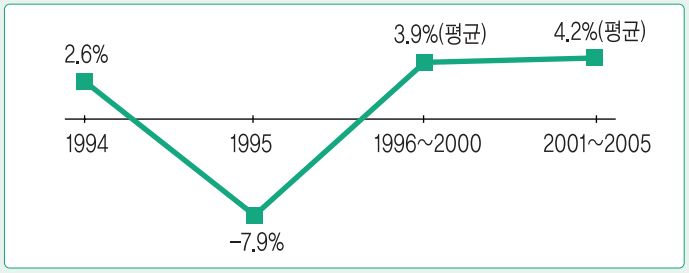
OECD 보고서는 빈곤문제의 원인을 교육 실패나 건강문제, 가정해체 등 국가 · 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때문이라기보다 내부 구조조정의 지연과 페소화 위기(1995)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면서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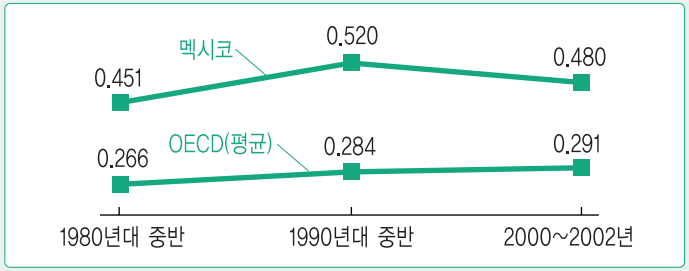
1994년 이후 1인당 GDP 추이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페소화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5~199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니계수가 개선되면서 빈곤문제도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OECD(평균) 지니계수 비교



※ **지니계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높다는 의미.

"멕시코는 NAFTA의 수혜국이다"

분명한 것은 NAFTA는 일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멕시코나 미국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멕시코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FTA는 국가 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지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 · 캐나다와 함께 NAFTA 수혜국이었다. 한국도 더 많은 FTA 체결을 통해 무역 개방의 혜택을 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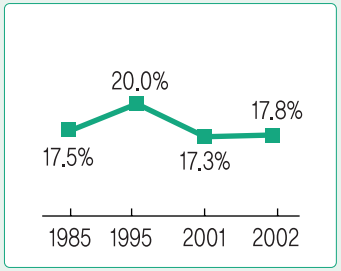
– 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 대사(매일경제, 2006.7.14)

캐나다는 NAFTA 전후 빈곤층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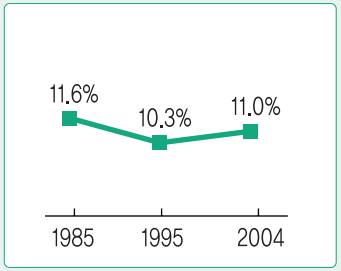
일부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이 고갈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공공사회 부문 재정지출은 NAFTA 체결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층 비율 역시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재정 지출/GDP



빈곤층 비율(자료 : OECD)



미국이 요구한 4개 통상현안을 협상 전에 수용했다?

4개 현안은 FTA와 별도로 논의돼 온 오랜 통상문제입니다

소위 '4대 선결조건'으로 표현된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스크린 쿼터 등은 FTA와 별도로 논의해 온 한미 양국 간 오랜 통상현안입니다.

미국측은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협상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사안별로 분리대응해 왔습니다.

의약품 : 약가제도 변경은 '선결조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로 한미 FTA 2차 협상 일부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정부가 약가 문제를 미국측에 사전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건강보험에 넣는 포지티브 방식임

쇠고기 수입 :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랐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로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수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양국간 교역불균형으로 인한 반덤핑 조치 등 무역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의 환경기준을 유지하면서 1만 대 이하 판매자에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 것입니다.

※ 2005년 우리는 미국에 71만 대를 수출했으나 미국은 우리에게 5,500대 수출에 그침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신천지로 가는 길"

우리는 지금 1492년 동방무역의 활로를 대서양 횡단에서 찾았던 콜럼버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국민총생산 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 12위의 한국호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바다를 건너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의 신천지로 건너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국민일보, 200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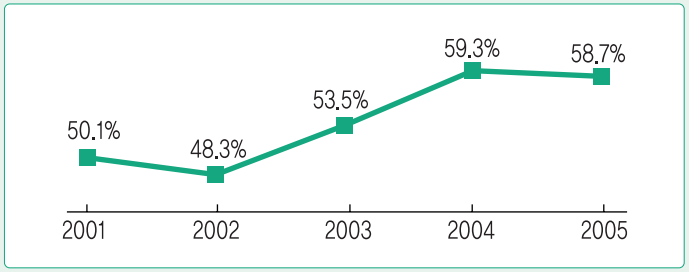
스크린 쿼터 : 한국 영화, 세계와 경쟁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는 지난 1998~1999년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당시 국회 등에서 한국 영화 점유율 40%를 축소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영화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가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촉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도별 한국 영화 점유율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미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

정당한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한미 FTA의 투자협정안에는 투자자 · 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으며, 미국 · 유럽 등 주요국이 체결한 2,400여 개의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협정, 상가포르 · 칠레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등에도 해당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불법적인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협정위반이나 내외국인 차별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피제소국 61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 피제소국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투자협정(BIT)에서 우리측이 투자분쟁해결 절차를 강력히 주장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환경 관련 규제는 주권사항으로 침해받지 않습니다

투자분쟁해결 절차가 국내의 환경 관련 규제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은 기우입니다. 현재 국내 환경 관련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며, 미국 기업을 부당 차별하지 않으면' 그 보호수준을 주권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4년 개정된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모델을 통해 투자촉진을 이유로 노동과 환경기준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 안전 · 환경 등 공공후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

FTA는 눈에 보이지 않는 21세기 초고속 인프라입니다. 수출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밖에 없습니다. FTA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 김한수 외교부 자유무역협정국장(국정브리핑, 2006.2.2)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농업을 제외하면 일자리 총량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농업 분야를 제외할 경우 장 · 단기를 불문하고 외자유입 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장벽 철폐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투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한미 FTA 고용창출 효과

구 분	정태적 효과 (단기) (쌀 포함)	자본축적 효과(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쌀 포함)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쌀 포함	쌀 제외
고 용 (인원 기준)	−0.51% (8만 5천 명 감소)	0.63% (10만 4천 명 증가)	3.30% (55만 1천 명 증가)	3.10% (51만 8천 명 증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 정태적 효과, 자본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은 13쪽 참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호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로 외국 자본이 진출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소유한 GM대우는 최근 해고 노동자 1,700명을 복직시켰습니다. 2002년 10월 1만 1,610명이던 고용규모도 지난 2월 1만 8,577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늘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쇄국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한미 FTA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개방 전략의 일환이다. 한미 FTA가 을사늑약을 낳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조류에 애써 눈을 감고 쇄국정책이라는 몽롱한 아편에 젖어 순간적인 위안을 구했던 조선이 역동성과 경쟁력을 잃고 당해야 했던 치욕이 을사늑약이다. 그런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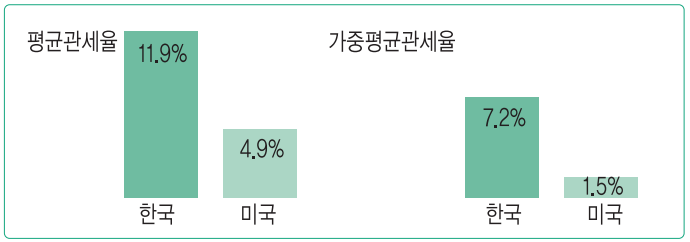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국정브리핑, 2006.5.12)

제조업 부문도 별 이익이 없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 수준은 우리보다 낮은 게 사실이지만, 미국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란 면을 감안할 때 관세를 조금만 낮추더라도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집니다.

한미 관세율 비교(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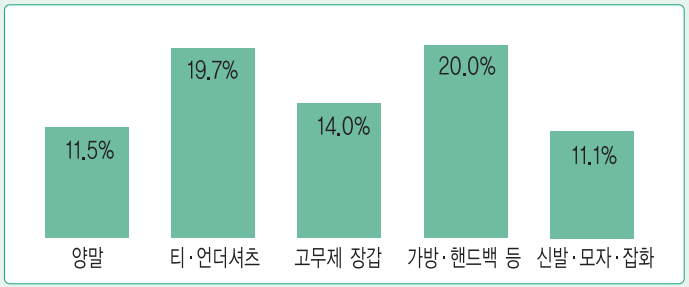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 중국 · 인도 · 아세안 등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관세를 없애기 때문에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주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소형 상용차는 미국 관세율이 25%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등 고관세 품목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우리만 관세를 내지 않게 되면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품목별 평균 관세율(%)



특히 우리의 주력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는 관세 인하 · 철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 완성차에 대한 납품 증가로 수출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자 분야의 경우 영상 · 가전제품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2~5%의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TV, 고급 가전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늘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디지털 TV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넛크래커 상태를 벗어나는 세계화 시대의 윈윈전략"

한국은 흔히 호두 까는 도구인 넛크래커(nut-cracker) 속의 호두에 비유되곤 합니다.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미국 · 일본 등)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개도국(중국 · 인도 등)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 '빅2의 협공과 일본의 외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통상외교가 절실합니다. FTA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FTA는 세계화 시대의 윈윈전략입니다.

–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청와대브리핑, 2006.7.6)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해석은 과장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농업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를 제외하거나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자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설탕은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고 쇠고기 · 낙농품 · 땅콩 · 연초 등의 농축산물은 수입쿼터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협상 결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치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제2의 '아이팟' 신화"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미 FTA는 새로운 협력기회를 통해 한국의 기술혁신 사이클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합심해 미국이 품고 있는 무한한 원천기술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공동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기술협력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제2, 3의 '아이팟'도 실현가능한 꿈이 될 것이다.

–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국정브리핑, 2006.7.6)

지원대책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의 장기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농촌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력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고, 오히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 산업의 총 산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도 늘어납니다.

국내 전문인력 채용이 늘어납니다

금융 · 보건 · 컨설팅 등 사회 서비스업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유통 서비스와 컨설팅, 여론조사, 전시대행 서비스 등의 분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추가적 자본투자와 국내 기업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 까르푸도 철수했다. FTA도 겁먹을 필요 없다"

유통시장 개방 당시 해외의 거대 업체들이 몰려오면 국내 시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걱정들이 많았다. 그러나 까르푸와 월마트의 철수를 보면, 기우로 판명났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FTA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한국 소비자들은 까다로워졌다.

– 오세조 연세대 교수(중앙일보, 2006.5.26)

구조조정에 대비해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교육이 강화됩니다

미국 기업에 의한 인수 · 합병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능력개발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 · 전직 ·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http://fta.news.go.kr http://www.fta.go.kr